

대북 및 대일 외교에 대한 제언과 고언(苦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상억

1. 북한: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와 금강산 시설 활용 및 철원의 역사생태 공원화

“좌파 우파 정치를 떠나, 화약고를 불쏘에 지고 들어가려는 위험천만한 전쟁 상대가 지척에 있음을 심히 불안해하고, 만약 내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된다면 어찌나는 걱정을 하는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곧 70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 이런 글을 써서 돌리는 사람들의 걱정을 접하고 새삼 현재 한반도 상황을 숙고해 보게 되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전쟁이 나면 한미 공군력으로 사흘 안에 북한은 완전 초토화된다는 모 신문 논설위원의 주장이 있다. 먼저 EC130, EA6B 같은 전자전 항공기가 북한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F16의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 전파 추적으로 폭격, 성능이 두 배인 F15K가 고공 정밀유도폭탄 공습을 한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전투기종이 남한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전자전 항공기, 공중 조기 경보기, 레이더 파괴 미사일도 없다. 미군의 F22도 가담하여, 개전 초 ‘하루 2천 회 출격’으로 사흘이면 평양 이남 제공권을 확보하고 장사정포의 7할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장사정포는 스텔스 드론 무인기로도 타격할 계획이라니 더욱 다행이다. 물론 B52와 스텔스 B2 폭격기는 평양 심장부의 병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을 공포의 무기다. 미국의 핵항모도 뒤이어 들어올 것이다.

수소탄까지 개발한 것처럼 공갈치는 북한의 핵무기는 현 단계로서는 운반체의 개발이 아직 미흡하지만, 포기시키지 않는 한 머지않은 장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미온적 제재로 쉬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도 배치하고 전세계적 압박으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어를 해야 한다. 또 생화학무기나 특수부대의 침투는 일반인들이 대처를 잘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평소 실질적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 잠시 중국의 ‘사드’에 대한 태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멋대로 까불지 말라”는 관영 환구시보의 한국에 대한 경고는 결국 과거에 한반도를 제후국으로 간주하던 전통적 중국 황제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에 유학시 하버드대의 지도실에서 CIA 편찬 역사지도를 보다가 한반도가 1897년부터 1910년까지만 중국과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사실을 보

고 아연실색했다. 이는 중국이 대한제국 기간만 독립을 인정하고 그전 몇 천 년을 viceroy(황제를 대리한 섭정 또는 태수)가 다스리던 속지로 보아 같은 황색을 깬 것이다. CIA는 이런 중국의 태도를 그냥 받아들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했던 것이다. 이런 속지(!)의 골칫거리인 핵문제가 대화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텐데 그냥 두둔하는 이유는 중국이 자기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무너뜨리는 변화를 결코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북한 핵무장을 방조하면서 한국 통일을 안 시키는 것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러시아도 기회가 있으면 북한 지역을 크림 반도처럼 삼키고 싶을 것이다. 극동에 부동항이 없어 38선 이북을 열른 점령했고 곧 이어 남침 지원까지 했던 전과가 있지 않은가?

벽두에 언급한 것들 외에, 북한이 최후에 달해 자폭할 생각을 가지지 않은 한, 남한을 쉽게 전면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더 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남한에는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이 많이 있어서 공격은 바로 국제전을 도발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이 북한의 40배인 남한을 상대로 장기간 전쟁할 경제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도발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단기간 기습공격을 해 올 경우 첫 사흘간 입을 남한의 피해는 여전히 막대할 것이다. 아무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남하시켜도, 이미 부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도탄을 개발해 놓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무력대응이 아닌 방향으로 점진적 유도를 해 나가는 연착륙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봐야 하겠다.

지난 2015년 10월 20회째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모처럼 성사되어 무난히 끝났다. 그런 뒤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 12월 중순 8년 만에 회담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달포 지난 1월 말 현재 아직 구체적인 회담 계획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더구나 그 사이 소위 수소탄 실험을 자행했으니, 차제에 모든 상황을 재검토하여 어쨌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흔히 IT의 도움을 받아 화면 상봉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북한의 체제에서 이런 창구를 열어 놓는 일은 특별히 눈에 띄는 선전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처음에는 매스컴의 주목을 좀 받겠지만 상설되어 버린 후에는 지금의 극적 상봉 행사 같은 이벤트성이 별로 없다. 더구나 이동 거리가 짧아지도록 화면의 수를 늘려 여러 곳에 상면 창구를 열어 달라고 해야 할 텐데, 북쪽에서 사전교육을 하기가 번거롭고 남한의 모습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북한의 보안 체제상 불안하고 예민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바는 눈에 띄는 이벤트성만이 아니라 외화 획득의 수입원으로 이 사업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남한 관광객 충격사건 사과와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금강산 시설을 활용하여 상봉행사를 상설화하는 조건하에 저순위의 사과로 마무리하자고 하면, 뒤따를 관광사업 재개로 외화 획득이 긴급하니 협상 후 점차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강산 한 곳에서 개최하므로 통제가 손쉽고 상설 이벤트 명소로 선

전의 초점이 될 터이므로 수용가능한 안이라고 본다.

이 때 불법 차압된 금강산 시설의 소유 관리권 복구가 관광 재개에 앞서 선결되어야 한다. 또 항간에 떠도는 바에 따르면 조 단위 자금 지원이 과거에 있었다는데, 이런 음성적 외화 획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이번에 성사가 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는 햇볕정책 따위의 퍼 주기로 핵개발비를 대주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상봉의 모든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는 양성적 조건을 붙여서라도 상봉행사와 일반 관광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 가져가게 해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면 결국 접근의 길은 열릴 것이다. 다만 금강산 방문 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피살 재발이나 관광객이 인질로 잡히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열 통제가 가능해도 서신 왕래를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은 역시 수입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도 큰 배달료를 붙여 주어 서로 좋도록 접근해야 성사될 것이다. 가능한 한 음성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관행은 없애고, 좀 비합리적인 계산법이라도 양성화된 자금 지원 또는 비군사용 물자 지원으로 유도해서 상봉행사를 정례화, 상설화하는 것만이 노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적체된 상봉 희망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피하며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철원 일대를 역사생태공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서쪽에 개성공단이 있고 동쪽에 금강산 지역이 있으므로 중부전선의 격전지였던 철원 일대에 역사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북한과 협의하기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동독과 접경을 이뤘던 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그 속의 옛 군사도로를 산책로로 운영하는 독일의 예를 보아도, 철책을 거둔 뒤 서독에서 사라져 가는 동물들이 이 지대로 많이 이동해 있다는 보고다. 우선 철의 삼각지대와 백마고지 등의 근처에 흩어져 있을 지뢰들을 제거하고 생태공원의 시발지역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자. 이 일대는 철새 도래지로서 관광사업의 전망도 밝다. 훗날 가능하면 비무장지대 전역을 생태공원으로 해야 하겠지만 상징적 출발점으로 이 지역을 주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궁예의 태봉국이 십여 년(905~918) 수도로 삼았던 터전이 바로 그 철원 북쪽 비무장지대(DMZ) 속이니 앞으로 평화적 사업으로 남북합동 발굴조사를 거쳐 역사공원으로 현장을 보존하면 좋을 것이다.

2. 일본: 위안부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상응조치, 즉 소녀상 이전과 야스쿠니 신사 정리 및 일본 극좌파의 국내외 활동 단속

근래에 중국은 동북공정, 미세먼지, 항공구역, 영해 확장, 불법어로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